

POLITICS

광주시, AI·미래차 등 내년 국비 640억 요청

2025년 8월 6일 수요일

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전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륙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I)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I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총사업비 20억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등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사업비 995억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총사업비 200억원), 수직·아·차륙기 비

강기정 시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만나 지원 건의 김현중 국가안보실 1차장과 탄약고 이전 등 논의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주요현안 해결 강조

행안정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302억원), 마륙동 탄약고 이전(총사업비 3262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총사업비 158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뒷받침할 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 등 이번엔 건의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한정에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마륙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평동 군훈련장(포사격장) 폐쇄 등 군사시설 4종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비 편성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에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AI 2단계 사업인 AI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2+4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2+4 주요 현안’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신축 공모 등 인공지능(AI) 산업 주요 현안 2개와 광주군공항, 마륙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현안 4개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만 남았다

11일 자원봉사자 발대식...경기운영·안전관리 활동 대회티켓 사전예매 오픈...‘나만의 우표’ 예약 접수 선수단 76개국 739명 엔트리 등록...15일 최종 확정

광주시는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 ‘광주 2025현대세계(장예인) 양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기장, 수송·숙박 등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회를 위해 티켓 사전예매, ‘나만의 우표’ 발행,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시민 참여를 이끌며 대회 열기를 높인다.

△경기장 관람환경 대폭 개선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WA)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경기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양궁장 폭을 기존 210m에서 좌우 각 10m씩 총 20m를 확장하고, 장비 보관실 등 다목적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 또 경기장 준공 10년 경과에 따라 고신선 잔디를 새로 식재하고, 외부 도색, 노후 관람석 의자 교체 등 시설도 개선했다.

휠체어 이용 관람객을 위한 전용구역과 장애인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누구나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결승경기장 주요 관람구역 전면에 휠체어석을 마

련, 포용적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썼다.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는 800여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이 설치된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의 안전 관리와 동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한다.

△숙박·식사 등 국제 수준에 맞게 준비 조직위는 참가 선수단의 편안한 체류와 원활한 경기 준비를 위해 숙박, 수송, 식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선수단의 쾌적한 숙박 환경을 위해 광주지역 내 12개 호텔, 총 800여 객실을 확보했으며, 각 호텔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에게는 예·본선 경기장 내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등 이동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수송 부문 역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국가별 대기시간 조정 및 신속한 수송을 지원하며, 경기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에는 12일간 총 372대 버스가, 장애인양궁선수권



양궁대회 기념 우표

△티켓 사전예매 오픈...영원우표 발행 조직위는 8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gwangju2025.com)와 NOL인타파크 티켓(티켓 문의 1544-1555)에서 대회 관람권 티켓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입장권은 종일권, 오전권, 오후권 등 세 선권 방식으로 다양하게 관람객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예매 기간에는 평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전남지방청정과 협업체회를 기념하는 ‘나만의 우표’를 제작·판매한다.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가 디자인된 이 기념우표는 요금 표기가 없으며 영원우표(무연봉 우표)로, 우편요금 인상과는 관계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우표는 대회 시작 ‘D-30’일 6일부터 대회 누리집(www.gwangju2025.com) 또는 전화(062-603-7133~4)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9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오는 1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한다.

지난 7월22일 열린 대회 서포터즈 발대식에 이은 공식 일정으로, 대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경기 운영·지원, 안전관리,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한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 스포츠도시 광주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며 “2025년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시민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조직위원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 개최를 광주의 도시마케팅 계기로 삼아 국내외에서 더 많은 사람이 광주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장에 나와 응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으로 비장애인대회에 76개국 739명, 장애인대회에 43개국 427명의 선수단이 엔트리 등록했으며 최종 엔트리는 오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업 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영록 지사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의 출발점”

김영록 전남도지사 5일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가 책임 농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K-농업의 심장 전장에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은 지난 7월 23일 의결된 ‘농어업자해대책법’과 ‘농어업자해보험법’ 개정안이며, ‘농어업자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농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국회와 전남도, 현장 농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의 쌀 시장 개입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향후 쌀 생산량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생산자 단체가 전

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농민의 정책 반영력이 높아지고,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준가격 이하로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됐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반영해 설정된다.

농어업자해대책법 개정으로는 재해 복구비에 단순 시설 복구비뿐 아니라 기존 투입된 생산비까지 보상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 단기도 실거래가 기준 60%에서 100%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아울러 이상고온과 지진 등 신종 기후재해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돼 농민의 안정적인 생계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장이 맡아야 할 농업의 국가 책임지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생산자 단체가 전

박정원 기자 holbu@gwangnam.co.kr

이개호, 함평읍서 수해복구활동 지원 나서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읍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 군부대 장병, 해남·구례 등지의 사회단체 관계자 등 자원봉사자 180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천)은 5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 30여명과 함께 피해가 발생한 함평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지역에서 가재도구 세척, 상가 내 토사 제거, 폐기를 처리 등 나서 수해 복구 활동을 거듭했다.

함평읍 지역은 지난 3일, 1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 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개호 의원은 “상가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품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

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재의 연금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 성명을 통해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상품개발 등을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부 “경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 등 전환...배임죄 개선”

주가조작, 생명·안전 중대범죄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정전락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전환 대신 금액은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먼저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는 과징

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을 없애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